

기업지방이전 대책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4.21(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을 보고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는 지난해 1분기 바닥을 지나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경기종합지수('05=100)는 ('08.12月)89.5 → ('09.1月)89 → (6月)97.1 → (12月)99.9이고, 지방의 수출·생산 등 실물경제 지표들은 작년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지역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호전되었다.

지방 수출증가율(%)은 ('09.1Q)△25.5 → (2Q)△21.4 → (3Q) △19.6 → (4Q)9.8 → ('10.1-2月)26.7이고, 지방 제조업생산증가율(%)은 ('09.1Q)△16.1 → (2Q)△6.5 → (3Q) 5.0 → (4Q)17.5이며, 지방 설비투자 BSI는 ('

08.4Q)89 → ('09.1Q)84 → (2Q)92 → (3Q)97 → (4Q)99 → ('10.1Q)101이다.

금번 대책은 그간 지역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한 주요 현안과제들에 대해 금번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에 맞춰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회복 국면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특화된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조금규모가 현재 기업의 투자수요에 크게 부족하고,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에 치중하여 지방의 신규투자를 확충하는 데 미흡하다.

보조금 지원예산 증액 추진에 있어, 기업·지자체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11년 기업이전 및 고용 보조금 예산 증액을 추진키로 한다.('10년도 예산 1,106억원). 지방공장 신설 추가 지원

주요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지방 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 강화	① 지방이전·고용보조금 예산 규모 확충 ② 기존 수도권이전기업, 지방소재신규투자기업이외에 지방공장신설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본격화	① 선도산업에 대한 금융·입지·외국인투자 등 지원체계 강화 ② 선도산업 장기인턴십 도입 및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강화 ③ 선도산업 R&D 프로젝트의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조기 사업화
기업 입지정책의 효율성 제고	①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 ② 신재생에너지 투자·지식기반집적지구 지정 확대 등 新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확대 ③ 매년 입지만족도 조사·입지패턴변화 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입지서비스 제공
시·도 전략산업 지원 시스템 개편	① 단계 : 지역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② 단계 :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시도가 특화발전 주도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① 대덕특구의 국가 R&D허브 기능 강화 ② 연내 광주·대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

및 특화분야 등에 대한 집중 지원 고려 시, 내년도 약 2,000억원의 보조금 지원 수요 예상된다.

지원대상에 지방공장 신설기업 추가에 있어, 기존의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지방소재 신규투자기업 이외에 추가로 지방공장 신설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가칭)'으로 확대 개편된다.

지역특화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제고에서는, 부지매입 보다는 시설투자·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고용창출 기업, 낙후지역 투자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확대된다. 지역특화발전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을 우선 지원된다.

과제 2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본격화에 있어, 지난해 권역별 시·도간 합의를 거쳐 12개 선도산업·20개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총 242개 세부 R&D과제 선정을 완료하여 1차년도 사업 추진중('09~'11년간 총 9천억원 투자, 금년도 3,295억원)이다.

총 242개 과제, 630개 기관 참여(대기업 11%, 중소기업 77%, 대학·연구소 12%)하였다. 그러나, 선도산업에 대한 R&D 지원 이외에는 각종 제도적 지원이 없어 정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

금번 대책에서는 금융·입지·외국인투자지원 등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 기업이전 및 고용지원을 위한 보조금 현황 】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업	지원효과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04~'09)	2,209억원	247개	5.7조원 투자유치, 1.8만여개 고용창출
지방소재 신규투자기업 고용보조금('08~'09)	540억원	2,068개	1만여개 고용창출

를 구축하는 한편, 고용창출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선도산업에 대한 기업투자 확대에서는 선도산업 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0.1%p) 및 선도산업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초성향 신성장동력펀드와 지방기업투자전용펀드의 광역경제권 단위 활용을 추진한다.

선도산업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및 임대료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운영요령(지경부고시) 등을 개정하고, 국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선도산업 연관 기업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선도산업의 고용창출 기반 강화에서는, 선도산업 기업이 인재양성센터 4학년생을 1년간 장기인턴으로 선발하고, 직원 채용시 R&D 사업비의 일부를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연간 100억원 규모로 약 500명의 예비 고급 인력 추가 고용 가능하다. '선도산업 인력개발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R&D 기획 단계부터 기업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전

략을 수립한다.

과제 3인 기업 입지정책의 효율성 제고에서는,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0%, 수출의 72%, 고용의 40% 담당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09년말 전국에 815개 산업단지 지정(국가40, 일반368, 도시첨단6, 농공401)하였다. 그러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증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입지공급이 미흡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 저하되었다.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에서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개 국가산단(반월·시화, 남동, 구미, 안산)에 대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시행(10. 하반기)하고, 공공사업(도로, 주차장, 환경시설 등)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되었다.

녹색·지식산업 입주 확대에서는 민간이 산업단지 내 지자체·공공기관 소유토지(공공시설구역과 녹지구역)를 임차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녹지·도시공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력 제고할 것이다.

【 시·도 전략산업의 단계적 개편(안) 】

구분	'99~'09	'10~'11	'12 이후
단계	기반구축	1단계 개편 (전환기)	2단계 개편 (성숙·고도화)
중점방향	지역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지역 자율성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특화 발전
기획·평가	중앙 주도	중앙+지역 공동	지역 주도 (중앙권한 최소화)
주요성과	H/W 위주, S/W 지원	H/W 최소화, S/W 확대	S/W 중심

'10년 하반기 수도권 소재 국가산단 2개, '11년 중 지방 소재 국가산단 3개 지정되었다.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서는, 금년부터 최초로 노사관계·공장설립지원 등 '입지만족도'를 매년 조사·공표하여 지자체의 입지행정 서비스 경쟁유도한다. 조사설계(5월), 조사 실시(6~9월), 조사결과 분석(10~11월) 및 발표(12월)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선도산업, 도시형 산업의 입지 패턴 변화 및 수요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기업수요 맞춤형 입지정책을 수립한다. 전문가 T/F 구성(5월), 조사 실시(6~9월) 및 정책방향 수립(12월)된다.

휴·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대규모 필지의 분할처분에 대한 제한 완화로 소규모 입지수요를 충족한다. 산업용지 분할 후 5년 이내에는 산업용지 처분시 가격 및 당사자를 제한 중(산집법)이다.

과제 4인 시도 전략산업 지원 시스템 개편에서는 지난 10년간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시·도별 4개 산업)에 총 3조7,437억원을 투입하여 세계적 경쟁이 가능한 기업혁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 및 산업경쟁력 제고될 것이다.

향후 S/W형 지원사업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지역 주도로 특화된 산업발전을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1단계('10~'11년)는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이다. 지자체가 지역 특화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계획 수립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여 성과 경쟁을 유도한다.

2단계('12년 이후)는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시도가 특화발전 주도한다.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경쟁체제로 전환(bottom-up 방식)한다.

중앙정부는 컨설팅·평가·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고, 시·도가 자율적으로 지원기관간 협력 체제를 구축, 지자체가

【 대덕특구의 주요 성과 】

구분	입주기관수	매출액	연구개발비	기술이전
2008년	1,059	11.2조원	4.8조원	974건
'05년대비 증감	42.7%	338.3%	235.8%	59.4%

* 특구내 입주기업 중 거래소 상장기업은 3.8%에 불과

지역산업을 이끌어가는 구조 정착된다. '10년 말까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구조 개편, 지원기관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개편안 마련된다.

과제 5인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에서는 '05년 대덕연구단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1·2단계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기능을 확충하고, R&D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연구+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중이다.



산업기능 보강 등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도기업 창출 미흡, 낮은 기술사업화율 등으로 당초 기대치에는 미흡하다.

향후 대덕특구를 국가 R&D 허브로 지속 강화하는 한편, 광역경제권 내 경제거점을 추가특구(spoke)로 지정하여 R&D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

대덕 특구의 국가 R&D 허브로 기능 강화에서는, 대덕특구 내 고급기술 활용방안, 기술사업화 촉진, 특구 외 지역으로의 성과 확산 등 대덕특구의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세종시·과학비즈니스 벨트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R&D 성과의 파급효과를 제고한다.

광주·대구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추진에서는, R&D·산업화 역량을 겸비한 광주·대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광역경제권 내 R&D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R&D 성과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전문가 자문단, 추가지정 TF 구성 등을 통해 '10년 중 특구 동시지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